

■ 대한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간담회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역별·프로젝트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지방상의, 지자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50인미만 업체까지 확대를

소규모기업 혜택 못받아...인센티브제 개선 필요

미만 소규모기업으로 이들은 지원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일본은 지방분산 보조금, 유럽연합(EU)은 구조자금, 영국은 지역선별보조금(RSA) 등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세계 기업체 가운데 78.5%인 778개가 50인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전도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STX 증권업은 사업기간의 단축 및 당초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토지보상 금액을 6억원으로 절감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내 고용창출 600명, 연간 500억 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박 연구위원은 "일부 대기업은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률(GDP 성장률)도 높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토공 직원들 '땅투기'?

부동산경기 활성화 되자 미분양땅 186억여치 매입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가족 129명이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자 미분양된 회사 보유택지 186억여치를 선착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직원들이 본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직원은 14%에 불과했으며 2000년 이후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사들인 회사 조성지만도 321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택지값이 5억원 넘는 경우도 8명이나 됐으며 토공 지역지사장 부인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2000년 이후 토공 임직원이 회사 조성토지를 매입한 규모가 수도권만 1만1천568평이며 공급금액으로 321억2천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피부관리 하세요" 해 개최한 이벤트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피부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충무로 명보극장 앞에서 기능성 기초 화장품 업체인 '라펜'이 '링클린 스트레칭 에센스', '레스멜린 화이트닝 에센스' 출시를 기념해 개최한 이벤트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피부 상담을 받고 있다.

정기 예금금리 속속 인하

하나·신한 0.1~0.2%P↓은행권 확산될 듯

최근 은행들이 속속 정기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이후로도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예금금리 낮추기 현상은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2년제와 3년제 정기예금금리를 종전 5.1%와 5.2%보다 각 0.2%포인트 인하한 4.9%와 5.0%로 적용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美 수출 가능"

버시바우 美대사, 한·미FTA 효과 언급

알래스카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31일 "한국 유가농 제품을 자유무역협정(FTA) 하의 무역자유화에 따라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하는 세계경제 2006년 9·10월호에 게재한 '한미FTA 21세기 한미 관계의 중요한 기회'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에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는 민감한 부문들이 있고 한국은 관세철폐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공 간선시설 조성비, 아파트 高분양가 주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조성비 부담증가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지난달 31일 토공에 대한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간선시설비로 쓰이고 있어 아파트분양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토공이 부담토록 돼 있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간사업자 등이 이를 떠넘기고 있어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돼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공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간선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뒤 설치의무자에게 상황을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용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항이 없다며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 개선비용 부담액'이 내년 2월중 마무리되면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168조 결국 양극화 키웠다"

금융경쟁력 강화 실패...부동산 투기 불려

민중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외환위기 이후 5억원 이상 고액예금 계좌수가 3배로 늘어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공적자금 투입효과 분석' 정책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67조5600억원에 이르지만 경쟁력 강화효과는 불투명한 채 금융양극화의 밑거름으로 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표로 간주되는 국민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7년 7.2%에서 2002년 9.1%를 기록한 뒤 2003년 8.8%, 2004년 8.2%로 감소해 정부가 금융기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자금 투입은 개인의 금융자산 및 금융기관 간 양극화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8%에서 33.0%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일반은행의 시장집중도 변화를 보면 총대출 기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29.4%에서 2004년에 51.1%로, 총자산 기준은 28.0%에서 51.1%로, 총예수금 기준은 28.4%에서 52.8%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2005년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수는 1997년에 비해 40% 감소했다. 심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이 자산양극화, 특히 금융자산 양극화로 이어짐으로써 소득 불평등 격차도 크게 벌려놓았다"며 "고액 예금자들은 예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추가 자본이득을 얻음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 책임경영 강화 화학부문 회장에 박찬구씨

시장단 인사 단행



호석유화학 사장 ▲김완재 금호석유화학 생산총괄사장 →금호미쓰이 화학 사장으로 전보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부문내 관련업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학·항공·건설 부문에 회장, 부회장을 도입하고 1일자로 시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화학부문 회장 ▲박찬범 아시아나항공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항공부문 부회장 ▲신훈 금호건설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 ▲김병위 아시아나항공 부사장→금호플리캡 사장 ▲이연구 금호건설 부사장→금호건설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매년 10월말 사장단 인사, 11월말 임원 인사, 12월말 부장급 이하 직원 인사를 단행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columns: Job Name, Department,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roles like '선생원지니어링', '담당원전', '심호출력' etc.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교박 교박 낸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미청구자 3,443명·보험료 111억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식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지급 자격자 중에서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을 교박교박 납부해 연금수급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지 못한 수급자가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총 3천443명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